

"산업안전 모범사례 공유하겠다" 23명 노동자 참사현장 2주간 둘러본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8.13 21:38

아리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박순관 대표 증거 은폐 정황 ... 빠르게 구속수사 해야"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개최했다. 사진=송승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23명의 노동자가 한순간에 화마에 덮여 목숨을 잃은 대형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단 한 장의 형식적인 문서로 정리했다. 유가족들은 "23명의 노동자 사망에 50일을 넘겨 발표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것이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이정식 노동부 장관까지 줄줄이 현장을 찾아가 외치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인가"라고 절규했다.

민주노총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는 이미 7월2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요구를 제시했고, 지난 7월22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부, 환경부에도 전달됐다. 유족들은 이후 한번의 회신이나 회신조차 없던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맹탕대책'을 내놓았다면서 기함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고용노동부의 7월 3일~16일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제조업 산업단지 대책도, 리튬 밧데리 화학폭발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다. 개탄과 분노를 일으켰던 위험성 평가제도는 전면 개편은 커녕 인정심사를 일부 강화하는 것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리셀과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던 대책으로 숫자놀리기로 노동자 시민은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방치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역 산업단지의 왜곡된 고용구조(불법 하도급)를 어떻게 손봐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대책에 대한 어떠한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더해 대책위는 "아리셀 참사의 주범인 박순관 대표이사가 산안법, 중처법 위반의 혐의로 입건된 현재 상태에서도 증거조작과 은폐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중범죄자를 구속수사하지 않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구속을 촉구했다.

김태윤 협의회 공동대표는 "가장 큰 문제인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문제들 밝혔어야 했다. 그게 우리 아리셀 참사 유족들과 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결과는 말도 안된다. 정부당국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유족 추천 실질적인 민간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다시 지금당장 조사하라. 지금 정부당국이 이따위로 조사하는 사이에 23명을 죽인 박순관 사장은 증거들을 조작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며 애를 태웠다.

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신하나 변호사는 "결국 정부가 내세운 대책들은 돌고 돌아 회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조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고 봤을 때 결국 이 참사의 공범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달한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개최했다. 사진=송승현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